

## 중소·벤처기업 특허출원 급증세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중소기업이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1만6086건으로 전체 2만6788건의 60%를 차지해 98년 36.9%(2만1353건), 99년 43.6%(2만2793건) 등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의 경우 지난해 중소기업 출원비중이 36.7%(1만5533건)에서 올들어 7월말까지 51.8%(1만1030건)로 증가했으며 실용신안도 지난해 73%(7260건)에서 91.8%(5056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들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4614건으로 전체의 17.2%를 차지해 98년 4.4%(2540건), 지난해 7.9%(4141건) 등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 BM특허분쟁 대비 서둘러야

격화될 BM 특허 분쟁에 대비해야-미국의 델 컴퓨터사가 최근 4/4분기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 가치를 대변하는 나스닥 주가가 한차례 출렁거렸다. 99년에만 180억불의 매출과 15억불의 순익을 실현한 미국의 대표적인 PC 전문 메이커의 위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의 핵심은 델 사의 주문형 PC의 생산 및 판매 방법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서 4개의 BM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놀라운 사실은 BM 특허 망의 완벽한 구축을 위하여 주변 특허를 38건이나 출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델 사는 기술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른 개인용 컴퓨터 분야에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경쟁 업체

의 부상을 막는 매우 공세적인 무기로 BM 특허를 활용하고 있다.

IBM과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IBM 소유의 특허를 확보하여 부품 분야의 취약점을 보강할 수 있었던 반면에, 최대의 라이벌인 컴팩사에게는 델 식의 경쟁력 있는 영업 방법 특허를 허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BM 특허에 대하여 아직도 찬반 양론이 있지만,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은 이미 판가름이 났다.

과거에 의약품 발명은 윤리적인 이유에서, 농업 관련 발명은 인류의 식생활 관련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로 특허로 인정하는 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들 새로운 분야에 대해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인류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었는데 대해서 이제는 이견이 없다. 이제 전세계의 유력 기업들은 BM특허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사의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도 급년 들어서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BM 특허의 출원 이 대단히 활발하다. 특허청에서는 금년에만 BM 특허 출원건수가 모두 5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델 사와 같이 기존의 제조업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특허 획득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반면에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광고와 같은 좁은 분야에서 지나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특히, 금년 7월부터 전자 상거래 관련 BM 특허가 특허청의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8월부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공표 되면서 BM 특허의 권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많은 특허 분쟁일 것이다. 따라서, 벤처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경쟁업체의 BM 특허를 적극적으로 모니터 하면서 격화될 분쟁에 대비하고 자사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제품과 차별화 되는 주변 기술, 그리고, 자사 고유의 영업 방법 등

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적극적인 BM 출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 북한, 남한 지재산권 등록 거부 여전

남한의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이 북한에서의 등록은 물론 보호도 받지 못해 앞으로 본격화될 남북한 경제협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남한 지적재산권의 북한내 직접 출원이 불가능해 우리 기업이 제 3국을 경유해 출원하면서 불필요한 외화유출은 물론 일본,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만 이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한은 지난 80년 '내국민 대우원칙'을 표방한 파리협약에 동시 가입했지만 현재까지도 국내법 상의 국가승인과 정치적인 이유로 상호 출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협을 대비해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일본, 중국, 홍콩 3국을 등을 통해 건당 2000달러의 거액을 지불하고 북한에 상표등록을 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북한에 출원한 상표는 제 3국(120건), UN산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의 특허협력조약(PCT) 루트(700건) 등을 통해 대략 820건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상표출원도 우리 기업의 명의가 아닌 제 3국의 이름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실명 등록이 확정되도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등록 자체가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모(某) 변리사는 지난 7월 경 홍콩을 통해 총 23건의 00기업이라면 상표 출원을 했다가 출원인이 남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측으로 부터 등

록 자체가 거절된 사례가 있다.

## 문제점

문제는 제 3국을 통해 우회 출원을 할 경우 남측도 북측도 모두 이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통상 외국 기업이 국내에 출원할 경우 한건당 5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500달러가 고스란히 제 3국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한섭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북한이 상표 출원을 받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원 자체를 중단하다 시피 하고 있다."며 만약 허용된다면 연간 10만건 이상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남측 상표 등록 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 돼 북한에 진출해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는 점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출원 우선' 원칙에 따라 외국 경쟁업체나 제 3자가 우리기업에 앞서상표나 특허를 등록할 경우 본격적인 경협시대 상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양에는 외국 출원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소가 최소 8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평양특허상표대리소, Ks-Ks법률사무소 등인 것으로 거명되고 있다.

북한내 지재산권 출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북한내에서 우리기업과 경쟁업체간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예상되고 있어 경협의 전제로 남한측의 특허출원이 북한내에서 빠른 시일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응방안

일단 특허청-대한변리사회-업계로 구성해 결성한 남북한산재권교류협력 대책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등

을 방문해 남북한 경험 협상 때 이를 반영해 줄 것으로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상옥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남북경협이 원활히 되고 남한 기업의북한 진출이 활발해 지면 지재권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다.”며 “북한도 남한의 직접 출원을 허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인식전환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 지원미비로 지식재산권 특어 사상

지난 97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 희망한 해외 69개국에 대한 특허출원 49건이 정부의 지원미비로 '사장' 되는 등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박치영(郭治榮,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감사원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KAIST측은 97~99년 중 49건에 대해 2개국 이상의 특허출원을 희망했으나 3건은 미국과 일본, 나머지 46건은 미국 한국에만 출원이 의결돼 전체적으로 69개국에 대한 특허출원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이동원음의 홀로그램을 측정하여 음향 특성을 영상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의 경우, KAIST 측 발명자가 미국과 독일에 특허출원을 희망했으나 특허출원 및 등록유지 비용이 부족해 미국에만 특허출원하는 것으로 심의됐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이익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적 재산권의 국외 특허출원이 비용부족으로 보류되지 않도록 국외 특허출원 등록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KAIST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발명은 발명신고서 및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KAIST측에 양도해야 하는데도 소속 교수진 16명은 32건(특허 24건, 상표 6건, 실용신안 2건) 을 개인명의로 특허 등으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겨레신문

## “기능성 식품 특어 는다”

특정 생리작용을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식품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허청(www.kipo.go.k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능성 식품(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 등)시장은 국내 식품 총생산액 31조원의2.7%에 해당하는 약 8279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 중에서도 키토산, 칼슘제제, 알로에, 정제어유(DHA 등) 등의 점유율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세모, 서홍갑셀, 남양알로에, 풀무원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첨가물, 식품신소재를 중심으로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려는 벤처기업의 창업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라이브맥스 에그바이오텍 한식원 바이오맥스 대덕바이오 바이오엔진 비피도 바이로박트 유니젠 등은 대표적인 '식품벤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해 97년 114건, 99년 95건에 이르는 관련 특허를출원했다.

출처 매일경제

## 무료인터넷폰 특어분쟁 조짐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경쟁이 가장 심각한 인터넷폰 및 VoIP 업계에 기술특허 분쟁이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폰 '큐피텔(www.qptel.com)' 서

비스 업체 키텔(대표 박관우)은 큰사람컴퓨터(대표 김지문)의 프리웹텔(www.freewebtel.co.kr) 서비스와 앳폰텔레콤(대표 전국제)의 앳폰(www.atphone.com) 서비스가 자사가 특허출원중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키텔 측은 자사가 지난 99년11월 개발해 특허 출원한 '인터넷과 공중전화망(PSTN)을 이용하여 통신신호를 전송하는 방법 및 시스템(특허출원 제99-52907호 외)' 기술을 이 두 회사가 사전에 키텔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해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 계획을 밝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경고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회원에게 영구히 사용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유무선전화기로 가입자의 PC 또는 IP 폰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제 앳폰텔레콤 사장은 "키텔의 서비스와 앳폰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비스"라며, "아직 키텔 측의 경고장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은 바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공식 접수되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사가 지난 4월 특허출원한 '폰투폰 인터넷 전화국에 대한 통신신호 전송 방법 및 시스템'은 컴퓨터를 전혀 거치지 않는 인터넷폰 기술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큐피텔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지문 큰사람컴퓨터 사장도 "현재 미국에 특허 출원돼 있는 프리웹텔의 서비스와 큐피텔의 서비스 차이를 검토 중이며, 경고장이 접수되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인터넷폰에 얽혀 있는 수많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폰 특허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지식재산권 침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표절이나 모조 상품 판매가 연간 130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년 전쯤 지식재산권 도용에 맞선 미 정부의 법 시행 노력을 일원화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협의회는 세력 다툼 때문에 파행 운영돼 온 것이 사실. 비평가들은 온라인 표절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프트웨어 로비스트는 "관세청, 미국 무역대표부, 특허상표청 간에 법적 싸움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 간의 내분은 그야말로 치열하다. 그들은 각자 자기 몫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1999년 9월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 및 외국단체들 간의 국내의 지식재산권법 시행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권법 시행조정 협의회(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Council, NIPLEC)'를 발족시켰다.

NIPLEC가 당 협의회의 당위적인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통지를 연방 등기소에 고시하기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또한 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먼저 산업계에는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소식통들은 이 고시가 불합리할 정도로 짧은 대응 시간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NIPLEC는 응답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주기로 합의했다. 애당초 이 협의회는 당 협의회의 임무에 관한 주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지만 그 날짜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무부 형사팀의 지식재산권 담당 특별 법률고문인 로즐린 메이저에 따르면, 지금으로서는 공청회가 11

월에 열릴 것 같다고 전한다.

그녀는 지식재산권의 복잡성과 관련 정부기관의 숫자를 고려할 때 행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협의회가 상호 파괴적인 싸움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 온라인 표절, 이미 심각한 수준

한편 인터넷을 통한 표절 및 모조 상품 판매는 연간 1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산업 로비스트들은 밝혔다.

소프트웨어 및 정보산업 협회(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SIIA)의 부 법률 고문인 스코트 에드워즈는 “지난해 우리의 인터넷 감시 작업은 4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무역 단체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표절 사례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SIIA의 지식재산권법 법률 고문인 케이스 커퍼슈미드는 “법무부가 표절자들의 사건을 해소하도록 만드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가 해소한 사건은 4~5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메이저는 또한 법무부가 온라인 소프트웨어 표절 사례를 놓고 혐의자들을 기소한 건수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수를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단의 일류 지식재산권 로비스트들은 법무부가 지금까지 온라인 소프트웨어 표절 행위에 대해 6건도 채 못되는 사건을 기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커퍼슈미드는 “우리는 그토록 기소건 수가 적다는데 우려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뉴욕의 국제 상표 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대외관계 이사인 브루스 맥퍼슨은 1년 전 플로리다에서 법무부 지원으로 열린 한 모

임에 당 협회가 대표자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논의하기 위해 산업 대표자들과 각 주 검찰로부터 검사들을 이 모임에 초청했다.

맥퍼슨은 “각 주의 검찰관들은 ‘기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저작권담당자들은 어떤 사건도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사실은 우리 협회 사람들을 대경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맥퍼슨은 또한 “정부기관들은 서로 비협조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NIPLEC의 태만함을 익히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다른 산업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정부측의 통일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면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환영했다.

## 소프트웨어 도용 문제 근절해야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집행 담당 부사장인 밥 크루거는 현재 길거리 상점에서부터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기업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무수한 표절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프트웨어 표절 행위는 여전히 주로 근로현장의 문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도 인터넷 덕분에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크루거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이 모든 다른 형태의 표절 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과 SIIA는 문제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표절 문제를 좀더 가시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고 한다.

크루거는 표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인 웹사이트나 이베이(eBay)같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판매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SIIA가 올해 초에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91%가 불법제품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 표절 행위를 몰아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표절자들을 추적할 의무가 있는 관계자들을 일깨우는 것은 도용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몫이다.

비평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는 연방정부가 이 이슈를 많은 조정을 거치면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원고측은 범죄를 알리기 위해 서로 이질적인 정부기관에서 수많은 관계자들을 찾아야 한다. 더군다나 표절 행위가 보고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방 공무원들에 의해 취해진 대응조치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커피슈미드는 “서로 다른 정부기관들이 하나같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직화돼야 하며, 그들이 뭔가 할 일을 찾는다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일 뿐 아니라 개괄적인 대응계획을 내놓

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을 통합하는 단체들도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측에서 지적 재산권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역시 다른 나라의 관계자들과 좀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외국에 상점을 설치하면서 현지 국가들이 이 문제를 추적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거의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증가해 가는 소프트웨어 표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다.

크루거는 “우리의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이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다. 표절 행위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극제를 없애고 산업을 퇴보시키며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최우선의 국가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ZDNet Korea

## [북한] 저작권 '만대' 일괄관리

앞으로 북한 노래를 사용할 경우, 북한 조선만경무역상사의 음반판매 및 음원 관리 대행사인 일본의 '만대'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조총련계로 북한국적 소유자인 '만대'의 정경모 대표는 최근 문화관광부와 음반 관계자를 만나 북한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자신들이 저작권료 청구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북한의 노래가 남한에서 더 많이 불려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사업 확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음반은 귀순가수가 부른 북한 노래 음반 '기러기 때 날으네'를 발표하면서 저작권료 지불대상이 명확치 않아 저작권료를 한 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탁해 놓았으며, 보천보전자악단 소속 가수의 노래 모음집을 낸 '부곡무역'은 이미 '만대'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출처 한국일보

## 유사상표 출원 급감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검증없이 출원했다가 출원이 거절된 경우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www.kipo.go.kr 청장 임내규)은 10일 지난 98년까지 전체 거절사정건수중 평균 60%에 달했던 동일·유사상표 출원으로 인한 출원 거절 비율이

지난해부터 20%대로 떨어지는 등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유사나 선출원으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거절된 출원상표 비율은 지난 97년의 경우 1만9523건중 1만1897건으로 60.9%를 차지했고 98년은 3만2290건중 1만9353건으로 59.9%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만265건중 4371건으로 21.5%로 크게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309건중 2120건으로 25.5%를 차지했다.

이는 책자나 CD롬 타이틀, 인터넷 등으로 상표정보가 나오면서 출원인이 미리 상표 등록여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됐고 상표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자상표나 단순도형상표 일색에서 입체상표나 사이버와 관련된 상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상표 등 다양한 상표 개발에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심사처리건수 대비 거절사정건수는 25% 안팎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등록 요건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특허위반 침해품, 불공정 조사 이전 거래중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정지 명령 등 잠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반도체 회로설계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국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품은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통관이나 거래가 중단

된다.

또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시,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 3000만원 한도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0분의 2 이내로 사실상 상향조정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국내기업] 특허 크게 늘어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영국특허 획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들이 영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건수는 533건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23.9%나 증가했다. 이같은 취득건수는 개도국 중 최고수준이며 경쟁국인 타이완(327건)은 물론 프랑스(24건)·캐나다(253건) 등 일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237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전자(68건)·대우전자(66건)·LG전자(65건) 등도 9~11위에 올라 국내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은 영국에서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은 부진을 면치 못해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의 경우 지난해 84건 출원에 82건 등록에 불과, 영국 특허청 전체 출원건수(4만9,825건), 등록건수(3만3,309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극히 미미했다.

디자인 출원 역시 51건에 그쳤다.

출처 서울경제

발행 2000·11